

## 한국 진보정치세력의 반미주의와 ‘저항의 정치’: 노무현 정권 시기 한미 FTA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김 윤 철\*

이 논문은 노무현 정권 시기의 한미 FTA 반대운동 사례를 통해 진보정치세력이 ‘저항의 정치’ 양식으로 반미주의를 표출한 양상과 그 요인을 살펴본다. 저항의 정치란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표출 양식에 있어 ‘대안의 정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체제변혁적 사회운동 이념과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집합행동을 동원해 반대하는 실천이다. 이 논문이 특히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는 지점은 왜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이 민주화 이후인 노무현 정권 시기에 들어 제도정치 영역의 진입에 성공했는데도, 한미 FTA와 같은 대외정책 문제에 대해 저항의 정치 양식으로 반미주의를 표출했느냐이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은 진보정치세력 내 주류였으나 저항의 정치 양식을 더욱 선호했던 자주파 지도부라는 리더십의 특성, 노무현 정권의 비민주적 추진 방식과 원내 유일한 반대 세력이라는 데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정세 상황과 전략 운용 폭의 협소함, 원내 정당 구도 상 소수당의 위상을 가짐으로써 제도적 대안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 등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맥락 속에서 작용한 결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 한국 진보정치세력의 반미주의는 단지 주체의 이념 문제만이 아닌, 정세상황과 원내 정당구도와 같은 정치적-제도적 환경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주제어: 반미주의, 진보정치세력, 저항의 정치, 노무현 정권, 한미 FTA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1. 한국정치와 반미주의

한국의 노무현 정권 시기는 반미주의가 정치 갈등 전면에 등장한 시기였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당시 보수 세력에 의해 반미정권으로 인식되고 규정되었다. 하지만 반미주의를 표출시킨 주체는 노무현 정권이 아니었다. 민주노동당이 대표하는 진보정치세력<sup>1)</sup>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결코 반미정권이 아니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한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미주의는 이러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진보정치세력의 비판과 반대 과정에서 등장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을 위시로 한 진보정치세력이 펼친 한미 FTA 반대 운동 과정에서 가장 격렬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논문은 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이 한미 FTA 반대운동을 통해 저항의 정치양식으로 반미주의를 표출했음을 확인하고,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정치에서 반미주의는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민주화 이행과 그 이후 과정에서 특히 그러했다.<sup>2)</sup> 첫째, 반미주의는 1987년 6월 항쟁 시기

---

1) 민주화 이전인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성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반합법-전위당-폭력 노선에 근거해 혁명을 지향한 세력을 가리킨다. 민주화 이후에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 합법-대중정당-비폭력 노선으로 전향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10석을 차지하며 원내진출에 성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민중의 당-한국사회주의노동당-민중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노동당-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등을 거치며 당명 등에 있어 변화를 겪어 왔다. 현재는 정의당이 대표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후 분당 사태 등을 겪었으나 주요 이념과 정책, 조직 운영 방식과 주도적 인물 등에 있어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현연(2009) 참조. 한편 이 논문에서 진보정치세력은 주로 민주노동당을 지칭한다. 다만 한미 FTA 반대운동의 전개 상황이나 논의의 전개 맥락에 따라 특히 관점과 입장과 태도 등에 대한 서술에 있어 이들이 참여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진보정치세력으로 서술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밝혀둔다.

2) 민주화 이전 시기의 반미주의에 대해서는 이강로(2004) 참조.

전두환 정권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미국이 저지케 만들었다. 미국은 1980년 광주항쟁 때와 달리 전두환 정권의 군대 동원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반미주의가 확산될지 모른다고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만약 전두환 정권이 미국의 제지를 받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해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했다면 한국의 정치사는 지금과 매우 다른 경로를 밟았을 가능성이 컸다 할 것이다. 가령 다시 한 번 광주학살과 같은 비극을 겪으면서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둘째, 반미주의는 노무현 정권 시기 한미 FTA 반대운동을 주도한 진보 정치세력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1980년 광주항쟁 이후 반독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자행한 광주학살에 대해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1980년대부터 반미투쟁을 펼쳐 왔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그리고 한국을 미국의 신식민지로 보았다. 따라서 반미주의의 기치 아래 반제국주의-민족해방 투쟁을 전개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를 특히 주도한 세력은 반미 자주파(민족해방파:National Liberation:NL)로 불려졌다. 이들은 학생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친북이데올로기-주체사상-을 수용하기도 했다.

셋째, 1980년대 반미투쟁의 주력군이었던 학생운동의 엘리트 일부는 민주화 이후 제도정치권에 대거 진입했다.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였다. 하나는 김대중-노무현이 주도한 정당, 즉 현재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 계열의 기성 정당을 통해서였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계열의 신생 정당을 통해서였다. 양자 모두 민주화 이전의 비합법-전위당(혹은 통일전선체)-폭력 노선을 버리고 합법-대중정당-비폭력 노선으로 전향했다. 하지만 전자는 후자에 비해 한층 더 체제친화적인-기성 정치질서에 친화적인- 성향을 띠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졌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미주의 성향을 띠었던 운동 엘리트의 제도정치권 진입은 대미관계 문제를 둘러싼 한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갈등의 한 가지 환경적-배경적-요소가 되었다. 현재의 미래통합당과 같은 친미반공보수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이들의 반체제 운동 전력을 문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친미반공보수주의 계열의 정당-새누리당-은 노무현 정권 시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전시작전권 환수 정책을 한미(군사)동맹을 와해시킬려는 (친중) 반미주의자들의 음모라고 규정하고 비판했다. 미국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국정치의 주요 갈등 의제가 되었다. 민주화 이후 대미정책은 대북정책과 함께 한국정치에서 당파적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된 것이다. 이는 해방과 분단 이후 친미반공주의 일색이던 기성 정치권의 이념지형이 반미주의 세력의 형성과 제도정치권 진입의 과정을 통해 민주화 이후 크게 변화하였음을 의미했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 문제, 특히 반미주의는 한국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안이다. 최근의 동아시아 정세를 감안할 때에도 그러하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북핵 위기와 미-중 무역 갈등, 한-일 역사 갈등, 남-북-미 관계 진전의 지체 등에 있어 이해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관장하는 핵심이다.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미주의의 문제는 대외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한국(정치)의 반미주의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유의미한 연구가 소수 있긴 하다. 하지만 대체로 개념적 접근이나 역사적 접근 그리고 유형 분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채규철 2006; 이강로 2004; 커밍스 2003). 즉 반미주의의 일반적 의미가 무엇이며, 한국에서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등장했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그간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와 지역<sup>3)</sup>과 시대 상황에 따라 반미주의의 의미

와 형태와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이강로 2004; Crockatt 2003; Toinet 1990). 따라서 개념적 구분과 그것에 바탕한 분류 및 유형화 작업을 우선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채규철 2006; 이재봉 2005).

문제는 이로부터 반미주의가 실제 어떤 양상을 띠고 표출되는지, 또 어떤 요인에 의해 그러한 양상으로 표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포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기존 논의들에서는 대체로 반미주의를 감정이나 정책이나 이념 등의 차원으로 나누어 구분하지만, 실제 정치현장에서는 여러 차원이 상호영향을 주고 섞여 있을 수 있다. 또 일시적 현상인 것 같지만, 다시금 등장하기도 한다. 또 반미주의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반감이나 반대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권에 대한 반대의 차원에서 동원되기도 한다. 또 반미주의의 표출 양상은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해당 국가의 일상적 정치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한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반미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반미주의가 실제 표출되는 양상과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이 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이 주도한 한미 FTA 반대운동을 통해 반미주의의 표출 양상과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 시기는 한국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

---

3) 세계의 지역별(프랑스,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호주와 한국, 러시아와 중국) 반미주의에 대해서는 채규철(2006) 참조. 채규철은 반미의 지속성과 미국과의 문화적 거리를 기준으로 세계의 반미주의를 6가지 (정서적·정책적·이념적·극단적·만성적·일시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때 채규철은 한국의 반미주의를 일시적·정책적·이념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정책적·이념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격렬히 표출되었다는 점과, 최근에도 방위비 분담 문제로 특정 정치세력(민중당) 주도로 반미집회가 열렸음을 볼 때, 과연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주화 이후와 3김 시대 이후 한국정치의 균열과 갈등의 구조와 작동방식의 직접적 기원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진보로 불리는 진영 간의 정치양극화 현상이 바로 그 시기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보수 정당체계에 진보정치세력이 등장하면서 이념균열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강원택 2018). 또 제도정치영역의 밖에 존재하던 진보정치세력이 제도정치영역 내로 진입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는 반공주의-성장주의-자유주의 틀 안에 간혀 있던 한국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확장되어졌음을 의미했다. 또 권위주의 정권 시기를 계승한 양대 정당체계의 재편 가능성이 내장되었음을 의미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반미주의가 진보정치세력에 의해 다시 등장하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반미주의가 제도정치영역 내에서도 이념갈등의 주된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시기 이후, 특히 17대 국회 이후 여야 간 이념갈등에 있어 주된 이슈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대북-대미 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이다(가상준 2016). 따라서 노무현 정권 시기는 현 시기 한국정치와 그것에서의 반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살펴져야 할 시기이다.

한미 FTA는 바로 그러한 시기에 반미주의가 가장 격렬하게 표출된 문제였다. 이 때문에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 정치에서의 반미주의가 어떤 특징을 띠고 있었는지, 또 미국에 대한 한국 진보정치세력의 인식과 태도를 가장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한미 FTA가 미국을 상대로 한 정책이기에 자칫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대미 관계 정책에 대해 반미주의가 표출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 표출 방식이 격렬한 저항 운동의 형태를 띠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시기 진보정치세력이 제도정치영역으로 진입했음을 고려할 때, 왜 그러한 격렬한 저항 운동의 형태로 한미 FTA에 반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진보정치세력 역시 국회를 비롯한 제도정치영역 내에서 대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를 제한적이거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 진보정치세력이 한미 FTA 반대운동을 통해 반미주의를 표출한 양상을 추적하면서 그 방식을 -대안의 정치와 구별되는 '저항의 정치'로 개념화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반미주의를 표출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리더십, 전략, 원내 정당구도 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전제에 대한 논의와 분석 요소(들)의 추출

### 1) 반미주의와 저항의 정치 개념의 설정

우선 이 논문에서 반미주의란 미국의 정책, 문화, 가치, 이념에 대해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감정, 의사, 행위이다(이강로 2004; Rubinstein and Smith 1988). 감정에 그치는 문제는 반미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나, 정책과 이념에 대한 반대 여부도 감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 현실에서 반미감정 따로 있고, 반미이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채규철 2006)을 감안할 때, 여러 차원과 층위가 중첩적으로 작용한 현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감정의 문제인지, 이념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그것들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표출된 양상과 그 요인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 보는 것이 보다 유용한 개념 사용이 될 것이라 본다.

이를 전제로 이 논문에서는 한국 진보정치세력의 반미주의의 양상을 그들이 주로 동원하는 이념과 그것의 표출 방식 등으로 구성되는 '정치실

천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포착코자 한다. 이는 여러 측면과 요소(이념, 담론, 정책, 행동 프로그램과 방식 등등)로 구성되는 반미주의 표출 양상의 특징을 간략하게 하나로 묶어 지칭할 수 있다는 서술적 용이함을 확보하고, 뚜렷이 구별되는 정치실천 양식의 유형을 설정해 대비함으로써 유형 선택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 정치는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집권과 다수당)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더 많은 지지와 득표를 추구하고 타 세력과 협력하거나 경쟁하거나 갈등하는 실천이다. 이때 정치는 정당·의회와 같은 현대 민주주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러한 제도정치 영역 안에 국한되지 않고, 제도·비제도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세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실천양식을 채택해 운용한다.

이러한 개념 설정에 바탕해 이 논문에서 정치실천 양식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하나는 저항의 정치이고, 다른 하나는 대안의 정치이다. 저항의 정치는 대체적으로 거리나 광장과 같은 제도정치 영역 밖에서(혹은 제도정치 영역 안에서도)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등에 대해, 체제비판적·혹은 체제변혁적인 사회운동의 근본적인 이념에 기초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갈등을 동원한다. 그리고 주로 (비합적 혹은 합법적)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직접적인 집합행동을 전략으로 채택하고 구사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조직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타 정치세력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이념·정책적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대안의 정치는 주로 의회와 같은 제도정치 영역 안에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찬성과 반대의 단순 구도를 지양하고 제도적 절차를 활용한 타협과 절충과 거래를 전략으로 채택하고 구사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의 도출과 문제의 해결을 주도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율과 득표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sup>4)</sup>

4) 이는 정치를 관습적(제도적)/비관습적(비제도적)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 '전통적' 정의(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2010)에 준하나, 그것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

이와 관련하여 제습(Jessop 1982)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다수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성공적인 정치실천, 특히 헤게모니 투쟁에 있어서 해석의 방식(mode of interpretation)보다는 방해의 방식(mode of interruption)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석은 상이한 요소들에게 하나의 패쇄적인 이데올로기 총체에의 필연적인 귀속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상호대립적이고 적대적인 담화들 간의 의미 있는 논쟁의 가능성을 배제시켜 버리는 반면에, 방해는 의미들의 공통된 핵의 영역 위에서 벌이는 개방적인 설득과 논쟁의 과정에서 상대자의 담화로부터 제요소를 흡수해서 전유하고자 시도하는 상호담화적(inter-discursive)인 접근 방법을 내포하는 것이 때문이다. 저항의 정치는 해석의 방식에 가깝고 대안의 정치는 방해의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저항의 정치는 문제가 된 국가의 주요 정책 그 자체를 '부정적인 것' 혹은 '고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반대함으로써, 긍정적 측면을 포착해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안의 정치는 문제된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대체해야만 할 것이 아닌, '함께 고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정책의 목표와 내용과 의미를 -순서나 정도의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2) 분석요소와 틀: 정치양식 결정의 요인과 동학

유권자 다수 지지의 획득을 위한 정당 간의 선거경쟁과 의회 내 주도권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제도 정치에서는 방해의 양식에 기반한 대안의 정치가 더 바람직하다. 제습 역시 암묵적이거나 (체제변혁을 위한 체제 내적 진지의 구축을 위해)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단되는 '정치적 목표와 그 내용(해석 혹은 방해의 핵심 대상)'의 문제를 포괄하기 위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규범적 차원에서 그렇다. 여러 정치세력들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힘의 우위를 다투는 정치현장에서 어떤 정치양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규범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샤츠슈나이더(Shattschneider 2008)가 말한 바처럼 정치세력, 특히 정당은 승리의 전망에 기초해 모인 정치조직 혹은 집단이다. 그래서 이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 당 지도부의 주도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다수의 지지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균열과 갈등을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의도가 늘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조직 구성원에게서 그러한 전략이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는 판단을 끌어내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대안의 정치든 저항의 정치든 그것이 승리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들 때 선택 가능하다.

그런데 파넬비안코(Panbianco 1988)가 지적하였듯이, 승리 가능성만 고려할 수는 없다. 역사적 과정을 거쳐 구성원들에 의해 폭넓게 공유되어 있는 이념적 목표, 즉 정체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1980년대 반독재 민주변혁운동 과정에서 생성된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의 경우가 그렇다. 이들은 1980년대 반독재 민주변혁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반체제 정파운동 출신들로 이념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세력이었다.<sup>5)</sup>

이를 감안할 때 정치실천 양식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승리 가능성과 정체성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하겠다. 이 때문에 정치실천 양식의 선택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리더십의 성격을 첫번째 영향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정체성을 중시하거나 비제도적 정치영역에서의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리더십은 대체로 저항의 정치를 선택할 공산이 크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리더십이라고 해도 승리 가능성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

<sup>5)</sup> 이들의 이념적 목표는 체제변혁에 맞추어져 있었다. 가령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강령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유산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두번째 영향 요인으로 타 정치세력의 전략적 태도를 포함하는 정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리더십은 자신의 성향이 무엇이냐를 떠나 정세 상황에 근거해 자신의 선택이 정체성의 훼손을 막을 뿐만 아니라, 승리 가능성도 높이는 것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지지와 득표 경쟁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차별성 확보의 전략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때 눈여겨 볼 것은 차별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찬성-반대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타협과 절충의 경로를 차단할 공산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차별성 확보의 전략이 대안의 정치보다 저항의 정치와 더 친화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물론 차별성을 꼭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의 표방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명성이 다소 떨어진다 해도 찬반이 아닌 우선 순위의 설정이나 그것을 결정하는 방식과 절차 등 세부적인 차원에서 차별성을 끌어낼 수 있다. 이는 대안의 정치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영향 요인을 포착할 수 있다. 원내 정당 구도에서의 위상이 바로 그것이다. 세부적인 차원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제도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정치적 위상-가령 원내교섭단체의 지위 혹은 타정치세력과의 연합 형성 및 파기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대안의 정치보다 저항의 정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간접적인 수준에서라도 개입하기 위해 장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이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이 한미 FTA 반대운동 과정에서 반미주의를 저항의 정치 양식으로 표출한 요인 분석을 첫째, 한미 FTA 반대운동을 주도한 지도부의 성격, 둘째, 노

무현 정권을 비롯한 타 정치세력의 전략적 태도와 그에 따른 진보정치세력의 차별성 확보 전략. 셋째, 원내 정당 구도 상에서의 진보정치세력의 위상에 대한 파악을 통해 수행하되, 그것들이 서로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지를 염두에 둘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각의 요소들은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정치실천 양식에만 한정해 작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의 서로 분리된 작동을 통해 정치실천 양식이 도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3. 한국 진보정치세력의 반미주의 표출 양상

한국 진보정치세력의 반미주의는 저항의 정치를 통해 표출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가 계기였다. 한국 진보정치세력은 한미 FTA에 반대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반미주의였다. 한국 진보정치세력은 한미 FTA 반대를 위해 반미주의를 동원하며 집회 및 시위 같은 집합행동에 의존했다. 이는 1980년대 반독재민주화 운동 레퍼토리의 재연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미국 퍼주기론을 핵심으로 하는) 총체적 망국론이라는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규정, 둘째, 찬반의 이분법적 구도 형성과 전선체 방식의 운동 전개, 셋째, 한미 FTA 범국민대회의 개최를 통한 거리로의 복귀와 결사 항전의 주장이다.

#### 1) 한미 FTA에 대한 강한 부정적 규정: 총체적 망국론

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 진보정치세력의 반미주의는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규정에서 표출되기 시작했다. 한국 진보정치세력은 한미 FTA를 총체적 망국을 가져올 정책으로 규정하였다(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2007;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2006). 이러한 규정은 진보적 정치인, 지식인, 운동가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진보정치세력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수용되었다.

총체적 망국론은 주요하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에 관련된 것이다. 즉 총체적 망국론에 따르면 한미 FTA는 첫째, 그 추진 방식에 있어 투명성과 절차성을 무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존중하지도 않았다. 둘째,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대한 시장개방은 한국 경제의 종속성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서민의 삶을 파탄에 빠뜨린다. 아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총체적 망국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박석은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2007년 6월 한미 양국이 협정문에 최종 서명한 이후 “철저히 국민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협상이 진행됐다”고 비판했다(김종철 2007. 7. 6). 지식인들 사이에서 꽤 잘 알려진 계간지 『황해문화』는 2006년 가을 호에 「FTA와 대한민국」이라는 특집 기획을 냈다. 이 기획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한미 FTA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IMF 사태의 열배가 될 수 있다며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내렸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정책 참모(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국민경제비서관)를 지낸 정태인은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로 이제 우리의 법과 제도가 다 미국식으로 바뀌지는 거”라고 했다. “조선과 철강 반도체 자동차 최종조립 정도 빼고 나머지 제조업은 공멸할 것”이라고도 했다(김종철 2007. 8. 30). 정태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나와, 한미 FTA 논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이와 같은 주장을 설파했다. 대표적인 한미 FTA 반대 전도사가 된 그는

민주노동당에서 한미 FTA 저지사업본부장을 맡기도 하였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한미 FTA는 “한국 경제를 세계자본의 먹이감으로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라면서 “한미 FTA가 한국경제 및 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조차 분석하지 않은 채,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국정 조사를 통해 한미 FTA가 서민의 삶에 치명적 독극물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국민여론을 한미 FTA 반대로 돌려세워, 기필코 비준을 막을 것”이라고도 했다(「연합뉴스」 2007. 9. 7). 한미 FTA 반대 운동에 적극 가담해온 한 지식인은 한미 FTA는 ‘낮선 식민지’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이해영 2006).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규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결국 한미 FTA에 대한 진보정치세력의 슬로건은 “나라 경제 팔아먹는 한미 FTA 중단하라”, “미국에 다 퍼주는 한미 FTA 중단하라”, “사회양극화 심화시킬 한미 FTA 중단하라”가 되었다.

## 2) 찬반의 이분법적 구도 형성과 전선체 방식의 운동 전개

진보정치진영은 한미 FTA를 둘러싸고 정치 사회적 갈등 구도를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형성하고자 했다. 이는 부정적 인식과 규정에 바탕한 것이었다. 한미 FTA가 찬반을 중심으로 선명성을 경쟁하는 의제가 되는 것임을 의미했다. 동시에 다양한 비판적 입장들이 반대의 입장으로 단순 수렴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다.

실제로 2006년 3월말 범국본이 결성되면서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비판적인 세력들은 다양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대라는 입장으로 통합되었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석운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

다. “범국본은 3백여 단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에 따른 입장이 폭넓게 나뉘져 있다 … 현재의 국면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협상은 중단돼야 하고, 범국본은 협상을 저지할 것이다.”(「레디앙」 2006. 7. 8). 또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인가, 한일 FTA, 한-싱가폴 FTA 등 FTA 전체에 대한 반대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범국본에는 FTA를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미FTA는 나프타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동, 농민 단체는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단체는 한일 FTA, 한중 FTA를 먼저 맺고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대동소이하다고 본다. 크게 같은 것을 취해서 큰 그림을 잡아가야 한다.”(「레디앙」 2006. 7. 8).

범국본은 바로 이러한 찬반 구도 하에서 민주노동당 등의 참여에 바탕해 구성된 전선체 였다. 1980년대 반독재민주화 투쟁은 반민주-민주 구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미 FTA 반대 투쟁도 이런 방식으로 펼쳐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그러한 전선체 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국민투표 전술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나라 전체의 찬반 전선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의원도 국민투표 요구에 대해 “국회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연합 방위군에 대항하는 시민연합군 체제를 편성하는 전술”이라며, “광범위한 시민연합군을 조직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레디앙」 2006. 9. 3).

이러한 구상은 17대 대통령선거의 구도 전략으로까지 이어졌다. 박석은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한미 FTA 찬반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김종철 2007. 7. 6). 이러한 구도 전략의 구상에 바탕하여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권영길 의원은 선거 유세 중에 자신이 ‘유일한

FTA 반대 후보'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한 개혁적 성향의 환경운동가가 한미 FTA 반대에 대해 저차원적 진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미 FTA 반대론자인 정태인은 “진보 또는 개혁세력이라면 어떤 통합, 어떤 연대를 말하든 한미 FTA 반대라는 원칙을 앞세워 찬성론과 싸워야 한다”고 반박했다(정태인 2007. 7. 9). 찬반 구도는 결코 허물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 3) 한미FTA 반대 범국민대회: 거리로의 복귀와 결사 항전

부정적인 규정과 이분법적 구도와 전선체 형성은 전면적 투쟁으로 이어진다. 타협의 여지를 애초부터 배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세력 역시 마찬가지였다. 개혁 vs 수구라는 구도를 통해 한미 FTA 반대 세력을 낡은 세력으로 규정하였고,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했다.

결국 2006년 7월 2차 협상의 개시와 함께 민주노동당과 범국본 등 반대세력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저항 운동을 전개했다. 1차 협상을 전후로 해서는 협상중단 서명운동을 전개했었다.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와 농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미 FTA 협정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을 심판 한다”며 거센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매국노’라고 비판하였다. 범국본은 정권 퇴진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대회장 주변을 봉쇄하고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며 진압하고자 했다. 범국민대회는 짝수 협상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최종 협상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2006년 11월에 열린 대회 때에는 전국 동시다발 형태로 개최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대회 참가자들은 관공서를 기습하고 파괴하기도 했다. 민

주화 이후 매우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된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1980년대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와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진보정치」 2006. 9. 20). 범국민대회 때마다 참가자들에 의해 ‘전쟁’, ‘총궐기’, ‘결사 항전’ 등 전투적인 구호들이 외쳐졌다. 2007년 4월 범국민대회 때에는 민주노동당 당원 한 사람이 “망국적 한미 FTA 폐기”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했고 결국 생명을 잃었다.

8차 협상이 있었던 2007년 3월에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이 전개되었다. 문성현 대표는 “곡기를 끊어, 필사즉생의 각오로” 한미 FTA를 저지하겠다고 했다(류정민 2007. 3. 8).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도부와 반대운동에 참여한 사회운동인사들이 동참하였다. 1천여 명에 달하는 단식 농성단을 꾸리기도 했다. 각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전개하기도 했다.

‘통상독재’<sup>6)</sup>에 대한 저항의 방식은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투쟁과 한 치도 다르지 않았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범벅되었던 거리의 저항이 복원된 듯 했다.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노동당 지도부들의 모습은 1980년대 반독재민주화 운동에 가세했었던 전투적 야당 지도자들을 보는 듯 했다.

---

<sup>6)</sup> 진보정치세력을 위시로 한 한미 FTA 반대운동세력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의 행태에 대해 ‘통상독재’로 규정하였다. 노무현 정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FTA 반대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등 반대 의견이나 여론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틀어막고 찬성 여론 몰이만 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군사독재를 연상시킨다는 것이었다(「경향신문」 2007. 4. 22).

#### 4. 반미주의의 저항정치 양식으로의 표출 요인

저항 정치를 통한 반미주의의 동원은 제한적이거나 효과를 거둔 것 같았다. 1차 협상이 시작된 직후였던 2006년 7월 반대 여론이 근소하나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이 편성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한미 FTA를 말한다” 코너를 통해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은 42.6%였으나 반대는 45.4%였다. 또 정부의 사전 준비가 잘 못되었다는 지적이 73%에 달했다(정은경 2006. 7. 10). 2007년 3월에 들어서도 찬성은 단지 46.8%였을 뿐이었다. 반대는 44.5%였다. 반대 세력이 주장했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2%였다. FTA 협상이 국익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77%였다(강이현 2007. 3. 22).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저항 정치는 반대 의견을 유지해냈고 찬성여론의 확산은 막아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찬성 의견이 적었던 2006년 7월에도 한미 FTA는 세계경제의 흐름이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은 66.5%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단지 27.9%였을 따름이었다(정은경 2006. 7. 10). 결국 정부의 추진 방식 혹은 정부 역량 등에 대한 불신이 한미 FTA 반대의견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특히 한미 FTA를 반대하는 유일한 원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미약했다.<sup>7)</sup> 한미 FTA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한미 FTA를 반대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유권자들은 정치세력 지지 여부 결정에 있어 한미 FTA 찬반을 제 1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중에도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이 반미주의에 기댄 저항정치에 의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7) 17대 총선 직후 20%대 가깝게까지 올랐던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던 2006년 2월~2007년 6월 사이 5~7% 정도로 머물러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향신문특별취재팀(2007) 참조.

## 1) 자주파의 리더십

또 다른 진보정치세력 중 하나인 사회당은 한미 FTA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반미주의와 저항정치 의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했다. 금민 사회당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FTA라는 협상 형식 자체에 대해 찬반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협상 내용을 가지고 따져야 한다. 원천 무효가 아니라 비준 반대를 해야 한다. 재협상하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FTA 반대라고 표방정치를 하고 있다. 그것은 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 마치 일종의 전선체 같다. 정당과 전선체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북방경제권은 개척해 중국이나 러시아는 공동무역 경제권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왜 안되냐는 것이다. 일종의 반미지상주의가 근저에 깔려 있다”(최경준 2007. 12. 4). 금민 대표의 비판은 범국본 지도부에 의해 확인되었다. 범국본 지도부는 한미 FTA 반대를 외치며 분신 자살한 민주노동당 당원의 장례식에서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던 것이다. “000 당원의 죽음은 협상중단을 요구하는 전민중적 요구를 짓밟으면서까지 굴욕적인 한미 FTA협상을 강행한 정부와 탐욕스러운 요구를 강요한 미국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레디앙」 2007. 4. 16).

이보다 앞서 범국본은 2006년 4월 19일, 4.19 혁명 46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FTA를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을 조직했었다. 행사는 범국본 참여단체 대표자들과 재야원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이 들고 나온 현수막에는 ‘총체적 대미 종속’을 우려하는 각계인사 4.19 시국선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날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권경희 2006. 4. 19). 뿐만 아니라 범국민대회 때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1980년대 반미운동을 연상시키는 행동이 있었다. 한미 FTA 반대는 주한 미군

의 전략적 유연성 반대, 즉각적인 미군 기지 철수 등 반미 의제와 관련된 사항과 함께 다루어졌다. 한미 FTA가 이른바 ‘미국 문제’라는 틀 속의 하나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6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열렸던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한미 FTA 저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 폐기를 위한 8.15 자주평화 범국민대회’였다. 이는 10월에 열린 민주노동당 당원 대회에서 그대로 재연되었다. 북핵 실험이 감행된 직후였다. 이용대 정책위 의장의 “북한의 자위권을 위해 대미 북핵이 용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주장은 한미 FTA 반대 투쟁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반미가 매우 근본적 반미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한미 FTA 반대 투쟁이 1980년대 주창되었던 민족해방을 위한 비타협적인 반제 반미 투쟁의 선상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한미 FTA는 반미가 필요한 의제였다. 1980년대 이후 진보적 운동가이자 사회학자로 잘 알려진 이진경은 한미 FTA 문제에 대해 “미국에 대한 투쟁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한미 FTA에 투쟁에 대해 “민족이 투쟁의 주체로 호명되서는 안된다”며 ‘모든 소수자들의 구체적인 이익의 문제’를 통해 사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투쟁이 민족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넘어선 구체적 대안의 제시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즉 그는 민족, 민족주의가 대안 제시를 위한 사유를 가로 막는 인식의 장애물이라고 보았던 것이다(이진경·고병권 2006. 4. 24).

1980년대식 반미인식에 갇힌 투쟁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반미투쟁의 지평이 차단되었다. 구체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조직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총체적 망국론이 그들의 유일한 무기였다. 범국민대회는 그들만의 데모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진보정치세력이 반미주의 저항정치에 의존했던 이유로 우선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리더십이다. 민주노동당 내에서 반미 민족주의 이념을 강하게 지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불렀다. 이들은 2004년 4월 이후 이들이 민주노동당의 지도부를 차지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원 구성에 있어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그것은 범국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 이념의 낙후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들은 당권 장악 이후 주로 당내 활동가들의 동원에 기반해 저항의 정치를 펼쳐 왔다. 식발, 단식, 점거, 대규모 집회 등의 투쟁 방식이 오히려 원내 진출 이전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한 이해 조정의 정치에 대한 경험이 그들은 전무했다. 1980년대 이후 그들은 줄곧 저항적 사회운동세력으로 존재해 왔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미국 문제로 편재될 수밖에 없었던 한미 FTA 문제는 그야말로 전투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 특히 한미 FTA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 부문이었던 농민단체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더욱 그러했다. 농민단체 중 진보적 성향을 지닌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도 자주파는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지도부 구성에 있어 이 단체 출신의 당원에게 최고위원 한 자리를 할당하도록 되어있었다.

## 2) 노무현 정부의 비민주적 추진 방식과 유일한 반대 세력이라는 차별성의 함정

노무현 정부의 추진 방식은 분명 비민주적이었다.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경제효과 산출에 있어서도 국책 연구소 연구결과에 대한 조작 시비가 제기되었다(신범철 2007. 5.23; 노주희 2006. 11.21). 이는 진보정치세력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미 FTA 논의가 시작된 초기에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치세

력의 반대 입장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부의 실책 때문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보정치세력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그저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 또 정부가 양보하지 않는 한, 결코 반대 입장을 철회할 수도 없었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처럼 단지 억압적 국가권력에 의존한 정권이었다면 반대 투쟁은 큰 반향을 얻어냈을 것이다. 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한미 FTA를 반대했다면 정부는 반대 세력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상독재에 대한 평가는 군사독재와 달랐다. 잘 할지는 의심스럽다 해도 적어도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노무현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다소 상승한 것에서도 알 수 있었다.<sup>8)</sup>

그렇다고 대안의 정치로 바로 전환할 수도 없었다. 한미 FTA의 문제에 있어 경제적 효과의 문제는 체험되지 않은 예측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대 입장을 유지한 채, 자신의 주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주장이 대세임을 입증해야 했다. 이 때문에 집회 및 시위 등 집단행동을 축으로 하는 저항정치가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당장의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은 문제를 갖고 대안 모색의 장에 나설 국민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결국 정부에 대한 반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인 권영길 의원은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FTA반대 후보는 나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른 후보들이 모두 FTA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구

<sup>8)</sup> 노무현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10%대에 머물러 있다가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된 2007년 4월을 경과하면서 다시 20%대 이상으로 올라섰다. 노무현 대통령 국정지지도 추이와 그에 관련된 정세 상황 등에 대해서는 이갑윤·이치호(2015) 참조.

실이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를 출범시킨 '민주개혁파'로 불리우는 세력들과 진보정당이 무엇이 다르냐는 유권자들의 물음에 곤혹스러워했던 민주노동당이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FTA는 큰 힘이되지 않고 민주개혁파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빠져 나오기 쉽지 않은 함정이 될 수 있었다. 차별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한미 FTA에 대해 완강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있었다. 차별성을 독점할 수 없었다. 타 정치 세력들 역시(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추진 방식에서의 비민주성 등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단지 찬성의 입장만을 제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민주개혁파 역시 졸속 추진 등을 이유로 한미 FTA의 추진과 노무현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체결 이후에는 여당 소속 의원들마저 단식 농성을 전개하는 등 저항의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다(YTN 2007. 3.30). 진보정치세력들은 그들과 연대하여 한미 FTA를 축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 개혁파들의 저항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것이었다. 즉 현 정부의 무리한 추진을 순순히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인기 없는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자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SBS 2007. 3.28; YTN 2007. 3. 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보정치세력에게는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저항의 정치가 갖는 변별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진보정치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의 하나였다. 저항의 강도를 더욱 높이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후자는 요원해보였다. 반미 민족주의를 동원하는 이념적 접근으로는 다수 국민을 설득할 수 없었다.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에 매달리는 접근을 시도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 '가상의 수치'일 따름이었다. 신자유주의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된다며 반신자유주의 투쟁 방식으로 접

근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결국 당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백만 민중 대화'를 통해 한미 FTA를 저지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섰다. 저항정치의 강도를 높여 나갔던 것이다.

### 3) 원내 소수 세력으로서의 위상에 따른 제도적 대안 추진의 제약

대안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원내 민주노동당이였다. 국회의원실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정책역량과 지식 및 정보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주요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당 초기 지도부로서 군소정당일수록 정책대안의 제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정활동도 경험함으로써 대안 제시의 중요성은 물론 방법도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부유세, 무상의료, 국공립대 통합,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과 같은 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정책들은 그들이 지도부일 때 나온 것들이다. 당 정책위가 수십 명에 달하는 최대 정책역량집단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과 정책관련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도 국회의원실이었다. 자원의 동원과 기동력 있는 대응에 있어 유리한 의사결정 및 과제수행 구조를 갖고 있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진보정치세력의 발언은 보수 언론에 의해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유력 의원들의 경우는 달랐다. 그들의 발언은 국민들의 주목을 끌 수 있었다.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이 그들이다. 실제로 통상절차법 발의나 정부의 졸속 추진 사례 폭로 등 대안 제시 및 효과적인 공세는 모두 그들과 의원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저항의 정치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원내 소수당이었기 때문이다. 2006년 6월, 국회에 한미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특위는 별다른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식물위원회’로 불렸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1년이 지난 후 특위의 해체와 국정 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국회 내에서도 저항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특위 최초 구성 시 민주노동당은 범국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 바 있었다. 첫째, 6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현 국회의원의 임기까지 그 활동을 지속하도록 할 것. 둘째, 매 단계별로 정부의 협상안 작성에 구체적인 사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해당사자와 시민사회대표, 전문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전문위원들과 의사소통을 수행할 것 등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고 특위가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면, 원내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속에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면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범국본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반대를 표방하며 장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으며,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우선 중점을 둘 수 없었다. 그래서 헌법 69조 1항(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구체화하는 통상절차법을 조기 제정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등 대안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경쟁을 전개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정치적 대표 역할을 맡은 민주노동당은 그러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었다. 국회의 의식 분포가 한국 정당정치체제의 역사적 특성, 즉 ‘보수양당 독점체제’(최장집 2010; 김수진 2008)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원내 소수당일 뿐만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지도 못했으며, 양대 정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지 못해 양대 정당 어느 누구와도 연합을 형성하고 파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사실 보수정당 우위구조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지극히 낮은 비례성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취약한 것이다. 독

일식 정당명부제를 기준으로 하면,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을 통해 30석이 넘는 의석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교섭단체 구성은 물론, 명실상부한 캐스팅보트를 지니게 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을 둘러싼 정치적-제도적 환경은 그러한 보수정당 우위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자원이나 전략적 기회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 5. 한국정치에서의 반미주의의 향후 전망

이 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서 이상의 논의를 한국 진보정치세력이 한미 FTA 반대운동을 통한 반미주의의 표출을 저항정치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의 상호연결적 맥락에 초점을 맞춰 논문의 주된 내용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정치에서 반미주의의 문제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논할 것이다. 끝으로 이에 바탕해 향후 한국정치에서의 반미주의의 문제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 시기는 민주화 이후 반미주의가 가장 격렬하게 표출된 때였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적극 추진한 한미FTA에 대해 진보정치세력이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반미주의를 적극 동원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은 특히 저항의 정치 양식으로 반미주의를 표출했다. 1980년대 반독재 민주변혁운동 과정에서 등장했던 반미 민족주의 이념을 동원하며 한미 FTA를 총체적 망국론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낫선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반미주의 이념의 동원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찬반구도를 형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전선체를 구성해 거리로-제도정치 영역 밖으로 나와 '결사항전'을 기치로 내걸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열며 반

대운동을 전개했다.

한국의 진보정치세력이 이러한 저항 정치의 양식으로 한미 FTA 반대 운동을 펼친 요인은 세 가지였다. 이들 요인은 서로 연결된 맥락 속에서 작동했다. 첫번째 요인은 리더십 측면에서 반미 자주파가 당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1980년대식 반미주의와 민족해방 노선을 추종하는 정파였다. 또 이들은 제도정치 영역의 경험이 미약했다. 이때문에 (제도)정당 보다는 사회운동단체의 행동양식에 더욱 익숙했다. 즉, 대안의 정치보다는 저항의 정치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런 반미 자주파가 당권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바로 저항의 정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의석을 보유한 제도 안의 정당으로서 대안의 정치에 대한 당 안팎의 요구를 쉽게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또 한미 FTA가 미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연결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반미 민족주의 이념에 기대야만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한미 FTA는 정책적 문제이기에 이념이 아니라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저항의 정치를 구사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했다. 또 저항의 정치가 당의 존재감과 지지를 드러내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일 수 있어야 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비민주적 추진 방식과 유일 반대세력이라는 차별성의 확보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반대 세력의 의견을 반영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 등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치 않았다. 또 국정연주소 연구결과 조작 시비도 있었다. 이러한 행태를 근거로 반대파들은 노무현 정권을 '통상독재'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한미 FTA 체결을 강력 추진했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반미주의(반제 민족해방 노선)에 기초해 한미 FTA 반대운동을 저항정치의 양식으로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일련의 객관적 상황이 조성되었음을 의미

했다. 그리고 저항정치를 통해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은 존재감과 차별성 확보를 위해 자신을 한미 FTA 유일반대세력으로 자처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군소정당으로서 득표력을 강화하기 위해 존재감을 드러내야 했다. 또 주류 보수 언론 등에 의해 '동종 혹은 유사 세력(진보)'으로 간주되는 노무현 정권 및 여당 세력과 차별성을 보유한 세력임을 인정받아야 했다. 이때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에 대한 유일한 반대세력으로 자신을 위치 짓고, 실제 그리 행동하는 것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는 함정이 있었다. 노무현 정권의 비민주적 추진 방식과 대선을 앞둔 정세 상황 등은 특히 여당 내 대권경쟁의 가열은 점차 집권여당 내에서도 한미 FTA에 반대하는 혹은 그 추진 방식에 대해 비판하는 정치인들을 등장시켰다. 이는 한미 FTA 반대 자체가 존재감과 차별성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했다.

한미 FTA 문제는 반미주의에 기대 총체적 망국론과 낯선 식민지론을 통해 반대운동을 확산시키고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즉, 한미 FTA는 산업부문별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였다. 단지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때문에 진보 정치세력은 부정적 경제효과를 수치화해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경제주의적 접근은 경험치가 아닌 이상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기회를 창출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대중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남은 것은 저항의 정치를 중단하고 의회 내로 들어가 특별위원회를 근거로 이해당사자를 조직하고 통상절차법과 같은 제도적 절차를 만드는 것이었다. 대안의 정치를 통해 반미주의의 제도적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선택은 백만 민중대회 등과 같은 형식으로 저항 정치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이는 대안의 정치로 전환하기 어려운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바로 세번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 문제 자체의 성격과 원내 소수당인 민주노동당의

위상에 따른 제도적 대안의 추진이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앞서 정리한 논의 결과를 통해 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 진보정치세력이 저항의 정치 양식으로 반미주의를 표출한 것과 그것에 미친 요인 파악 결과가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 짚어 보자.

이를 이론·실천적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 제시하자면 두 가지다. 하나는 이론적 측면이다. 한국정치에서 민주화 이후 제도권에 진입한 진보정치세력에 의해 반미주의가 저항정치의 양식으로 강하게 표출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표출 주체의 역사적 성격과 이념 등이 함께 작용한 매우 복합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책적 반미주의, 이념적 반미주의 등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온 반미주의에 대한 그간의 이론적 논의가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 즉 그간의 논의는 국가별·지역별 현상으로서 반미주의 그 자체가 아닌, 그 반미주의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한 요인의 유형 논의였다고 보는 것이 한결 더 정확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 진보정치세력이 저항정치의 양식으로 반미주의를 표출한 것은 반미주의의 강도가 높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이 이유도 반미주의를 특징짓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 때문에 향후 반미주의의 특징이나 요인 분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지 어떤 요인이 작용했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등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천적 측면에서의 함의로써 반미주의의 표출 양식은 단지 한국과 미국의 관계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당 간의 경쟁 관계로 인해 조성되는 정세 상황과 반미주의 표출 주체의 원내 정치적 위상과 같은 정당구도 문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반미주의의 해소 혹은 반미주의의 긍정적 작용·더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의 도출 등을 위해서는 반미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세력의 제도 진입을 봉쇄하는 게 아니

라, 그들이 대안의 정치를 선택하거나 혹은 제도적 대안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환경과 힘의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논문이 한층 더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반미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사후적 진단에 머물 공산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하다. 그래서 반미주의 문제를 현실 정치의 차원에서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실천적 경로를 포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특히 그러하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제도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등 국회운영 제도의 변경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경은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 그 변경이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어도 선거 제도나 국회운영 제도가 단지 국내 현실 정치세력들 간의 경쟁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한미 FTA 같은 대외정책, 그리고 한국정치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같은 대외정책을 원활히 추진함에 있어 그러한 정치제도의 변경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인지하느냐 아니냐는 정책 추진 방식에 있어서의 전략적 태도-제도변경 문제를 정책 추진의 지렛대로 삼을 것인지 아닌지 등-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향후 한국정치에서의 반미주의 문제를 간략히 전망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 시기 이후 13년이 흘렀지만 반미주의를 자극할 계기적 사안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2018년에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이행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또, 국내 정치세력들 간에 이견의 소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2000년대 들어 반미주의를 고양시킨 문제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관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군 기지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등을 둘러싼 문제도 새로이 제

기되고 있다. 또 미국 내 한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같은 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즉, 정책과 감정 등 다양한 차원과 층위에서 반미주의가 다시금 표출될 수 있는 환경적 현실이 조성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2000년대 초처럼 미군 기지 이전 반대나 한미 FTA 반대운동 같은 저항정치 양식의 대중적-조직적-이념적-정치적 반미 행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전망을 논함에 있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이 가설적 수준에서나마 그 이유를 짚아 볼 수 있다.

첫째, 10여년이 지나면서 반미주의 추종 성향이 강한 자주파의 위상이 진보정치세력 내에서도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을 거치며 자주파와 평등파의 대립을 축으로 분당 사태를 겪었다. 노선 문제를 둘러싸고 현 정의당과 민주당의 모태인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으로 분화되었던 것이다. 2012년 총선에서는 노무현 정권은 물론, 현 문재인 정권과도 가까운 국민참여당 일부까지 가세해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2004년 총선 때보다도 많은 13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공천 부정 문제가 터져 나와 다시금 분당사태를 겪었다. 이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다시 자주파가 주종을 이루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에 의해 해산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으로 이어지면서 그 존재감이 미미해졌다.

둘째, 그런 가운데 진보정치세력의 대표격인 정의당은 한층 더 제도정치 친화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변화해 왔다. 또 당의 주요 정책이나 노선에 있어서도 한미 FTA같은 대외문제가 아닌 경제적 평등이나 사회적 차별 같은 문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원내 소수정당의 지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미 FTA 같은 문제에 직접적 피해당사자이기도 한 농민과 노동자를 주축으로 한 민중운동조직은 물론, 참여연대 같은 시민운동조직도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 그런 가운데 2016-2017 촛불집회를 통해서도 확산한 바와 같이 미조직 일반 대중이 사회운동적 실천을 주도하고 있다. 국가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도 주로 SNS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 조직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이들은 1980년대 반독재민주변혁 운동 과정에서 성장한 이들이 아니기에 반미 민족주의 같은 이념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 정치에서 노무현 정권 시기처럼 진보 정치세력이 저항정치 양식으로 반미주의를 표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저항정치를 구사할 기반과 역량 자체가 미약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미국 관련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한미 FTA처럼 피해당사자가 진보정치세력의 지지집단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이슈-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미군 기지 노동자 처우 문제 등-가 대중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 다시 저항정치의 양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진보정치 세력이 여전히 원내 소수당의 지위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대안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2020년 4월 12일 접수, 4월 23일 심사완료, 5월 6일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가상준. 2016. “정책영역별로 본 국회양극화.” 『OUGHTOPIA』 제31권 1호. 327-354.
- 강원택. 2018. “한국정당정치 70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당정치의 전개.”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2호. 5-32.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07.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 진보개혁의 위기를 말하다』. 서울:후마니타스.
- 김수진. 2008. 『한국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서울:백산서당.
- 박영률 출판사. 2003. 『대한민국헌법』. 박영률 출판사.
- 샤츠슈나이더, E.E. 박수형·현재호(공역). 2008. 『절반의 인민주권』. 서울:후마니타스.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2010. 『정치학의 이해』. 서울:박영사.
- 세얼문화재단. 2006. 『황해문화』. 가을.
- 이갑윤·이지호. 2015. 『대통령 노무현은 왜 실패했는가: 논쟁적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평가와 성찰』. 서울:에이도스.
- 이강로. 2004. “한국내 반미주의의 성장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 44(4). 239-261.
- 이재봉. 2005. “세계의 반미주의: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증오받는 나라“가 된 배경과 과정.” 『한국동북아논총』. 35. 175-193.
- 이해영. 2006. 『낮선 식민지』. 서울: 메이데이.
- 조현연. 2009. 『한국진보정당운동사: 진보당에서 민주노동당 분당까지』. 서울:후마니타스.
- 채규철. 2006. “세계 반미주의의 연구: 세계 반미주의의 실체와 유형화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교육』. 45(4). 107-132.
- 최장집. 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후마니타스.
- 커밍스, 브루스. 2003. “한국 ‘반미주의’의 구조적 기반.” 『역사비평』 62. 45-84.
-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2005. 『정기여론조사』. 8월.

-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2007.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서울:강.
-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2006. 『한미 FTA 국민보고서』. 서울:그린비.
- Jessop, Bob. 1982. *The Capitalist State: Marxist Theories and Methods*. Cowley Road: Martin Robertson:Oxford.
- Panbianco, Angelo. 1988.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translated by Mark Silv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 Crockatt. 2003. *America Embattled: September 11, anti-Americanism, and the global order*. New York: Routledge.
- Rubinstein, A. Z. and Smith, D. E. 1988. "Anti-Americanism in the the Third World." *The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97(May). 35-45.
- Toinett, Marie-France. 1990. "Does Anti-Americanism Exists?." in *The rise and Fall of Anti-Americanism: A Century of French Perception*. Denois Lacorne. Jacques Rupnik. and Marie-France Toinet (eds). translated by Gerry Turner. 219-35. New York: St. Martin's.
- 강이현. "국민 83% 한미 FTA 3월달 체결 반대: 범국분·민노당 여론조사." 「프레시안」 2007. 3.2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3556> (검색일: 2020. 4. 6)  
 「경향신문」. "정부는 정말 '통상독재'로 가려 하는가." 2007. 4. 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4221746081&code=9901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4221746081&code=990101) (검색일: 2020. 5. 6)
- 권경희. "한미 FTA, 노정권의 어리석은 희극." 「레디앙」. 2006. 4. 19.  
<http://www.redian.org/archive/12143> (검색일: 2020. 4. 6)
- 권종술. "민주노동당 한미 FTA와 전쟁 선포" 「진보정치」 2006. 9. 20.  
<https://blog.naver.com/sparkoff/120029158291> (검색일 2020. 4. 6)
- 김종철. "일본처럼 했다면 한미 FTA 깨졌다..한미 FTA 반대하면 대원군 지지자?"

「오마이뉴스」 2007. 8.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31190](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31190)

(검색일: 2020. 4. 6)

김종철. “한미 FTA 찬반이 대선 당락에 영향줄 것.” 「오마이뉴스」. 2007. 7. 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088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0884&CMPT_CD=SEARCH)

[CMPT\\_CD=SEARCH](#) (검색일: 2020. 4. 6)

노주희. “장미빛 FTA 자료는 정부가 조작·왜곡한 것.” 「프레시안」. 2006. 11.2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33683> (검색일: 2020. 5. 6)

「레디앙」. “18일 허세욱 노동열사장 치른다.” 2007. 4. 16.

<http://www.redian.org/archive/17358> (검색일: 2020. 4. 6)

「레디앙」. “한미 FTA 국민투표 아니면 못막어.” 2006. 9.3.

<http://www.redian.org/archive/14110> (검색일: 2020. 4. 6)

「레디앙」. “대중참여 인혜전술로 FTA 태풍에 맞선다.” 2006. 7. 8.

<http://www.redian.org/archive/13322> (검색일: 2020. 4. 6)

류정민. “민중의 봄날 위해 한미 FTA 저지.” 「미디어 오늘」, 2007. 3. 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56> (검색일: 2020. 5. 6)

신범철. “날 때부터 신용 잃은 ‘한미FTA 효과 분석.’” 「오마이뉴스」 2007. 5. 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16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161)

(검색일: 2020. 5. 6)

「연합뉴스」. “노회찬 의원, 한미 FTA 한국경제를 세계자본의 먹이감으로 무장 해제 시키는 것.” 2007. 9.7.

<http://www.yna.co.kr/view/RPR20070907029600353?section=search>

(검색일: 2020. 4. 6)

이진경·고병권. “제국의 시대인가, 제국의 황혼인가. 한미 FTA를 둘러싼 정세에 관하여.” 「참세상」. 2006. 4. 2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tid=35979>

(검색일: 2020. 4. 6)

정은경. “한미 FTA ‘반대’ 국민 45.4% ‘찬성’ 42.6%.” 「미디어오늘」. 2006.7. 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10>(검색일: 2020. 4. 6)  
정태인. “한미 FTA 반대를 외치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가. 한미 FTA 반대가 ‘저차원적 진보’라는 최열 대표에게.” 「프레시안」. 2007. 7.9.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4767> (검색일: 2020. 4. 6)  
최경준. “반미지상주의...민노당은 낙후된 진보” 「오마이뉴스」 2007. 12. 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8292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82924)  
(검색일: 2020. 4. 6)  
「YTN」. “국회의원 48명, ‘FTA반대 시국회의’ 개최.” 2007. 3. 30.

[https://www.ytn.co.kr/\\_ln/0101\\_200703301136051845](https://www.ytn.co.kr/_ln/0101_200703301136051845) (검색일: 2020. 5.6)  
「YTN」. “범여권 주자, FTA 등 차별화 시동!” 2007. 3. 27.

[https://www.ytn.co.kr/\\_ln/0101\\_200703270506394824](https://www.ytn.co.kr/_ln/0101_200703270506394824) (검색일: 2020. 5. 6)  
「SBS」. “소신? 쇼? 김근태·천정배 의원 뒤늦은 단식.” 2007. 3. 2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236923&plink=OLD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236923&plink=OLDURL) (검색일: 2020. 5. 6)

Anti-Americanism of Korean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and politics of resistance: focusing on the anti Korea-US FTA movement during the Roh Moo-Hyun government

*Kim Yun Cheol\**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the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expressing anti-Americanism in the mode of 'politics of resistance' and its factors through examples of the anti Korea-US FTA movement during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politics of resistance is a conception that contrast with 'alternative politics' in the way of expressing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government's main policies. In particular, they oppose government's main policies, and mainly mobilize radical social movement ideologies and collective actions such as rally and demonstration. Especially, the point of this paper, which is intended to be discussed, Why did South Korea's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express anti-Americanism as a political mode of resistance to foreign policy issues such as the Korea-US FTA, despite the successful entry into the area of institutional politics during the Roh Moo-Hyun government after democratization? In particular, Why did they depend on the anti-American nationalist ideology and collective action that was formed and used mainly during the anti-dictatorial democratic-revolutionary movement in the 1980s? In response, this paper presents three factors. First, The leadership of the anti-Americans, who were the mainstream in the progressive politics forces but tended to prefer the

---

\* Professor in the Humanitas College of Kyunghee University.

political mode of resistance. Second, the Roh Moo-Hyun government's non-democratic or unilateral propulsion style and the trap of differentiation as the only opposi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ird, limitation of institutional Alternative propulsion due to the minority statu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se three factors were linked together and worked in a context.

**Key words:** Anti-Americanism, the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politics of resistance, Roh Moo-Hyun, the Korea-US FTA